지역개발연구 제37권 제1호, 2005년 6월, pp.19-33

남해안시대와 국가균형발전

김 성 국*

이 글은 남해안시대를 위한 지역발전 전략과 국가균형발전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으며 추진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남해안시대는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의 경쟁적 발전 대신에 문화적-의사소통적-협력적 발전을 추구한다. 둘째, 남해안시대는 기존의 영호남 지역갈등과 대립을 극복하는 영호남의 상생적 발전을 추구한다. 셋째, 남해안시대는 내륙 중심적-자연파괴적 발전 대신에 해양지향적-생태적 발전을 추구한다. 남해안 지역개발은 궁극적으로 동아시아해양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됨으로써 세계적 차원의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주제어: 남해안시대, 국가균형발전, 동아시아해양문화공동체

Ⅰ. 해양의 재인식

그간 우리는 우리의 바다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 그리고 노력을 얼마나 쏟았을까? 불행 중 다행인지, 최근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문제는 가장 생생하게 해양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해양에 관한 한 철저하게 준비된 국가인 일본을 절대 과소평가해서 안 된다.[1] 과장된 표현일지는 몰라도, "일본에서는 독도문제에 대한 많은 연구를 축적하였으며, 더 이상 연구할 것이 없다고 자신할 정도이다"(김선표 · 홍성걸 · 김민종, 2003: 47). 일본은 미국, 영국과 더불어 세계의 대표적인 해양세력의 하나이다. 일본의 국운은 해양진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일본이 인접국과 해양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 필연성이 존재하는 셈이다. 앞으로 일본과의 어업분쟁도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아름다운 남해의 수평선 위로 먹구름이 끼기 전에 만반의 대비가 필요

*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Tel: 051-510-226, E-mail: skkim21@chol.com

1) 해양대국으로서 일본의 면모를 살펴보자. 일본의 육지면적은 우리나라의 3배에 불과하지만 해양면적을 합치면 세계에서 5위에 달하고, 세계에서 도서개발을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전태갑, 2001: 167). 그래서 미국의 어떤 경제학자는 경제적 효율성이 높지 않은 섬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일본은 비효율성 때문에 세계와의 경쟁에서 낙오할 것이라는 예언까지 하였다. 일본 나름대로의 치밀한 계산이 있을 것이다.

하다.

해양은 생명의 원천이라는 철학적-문학적 영감의 대상일 뿐 아니라, 지구면적 혹은 지구라는 자원덩어리의 3/4 을 차지한다는 기능적 불가결성(不可缺性)을 갖는다. 그리하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바다를 둘러 싼 국가 간 전쟁과 바다 위에서 전개된 계급 간 갈등은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2] 바다는 이처럼 한편으로는 위기의 진원지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의 공간이라는 이중성을 갖는다. 삼면이 바다인 나라, 한국, 그간 해양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했을까? 해양수산부, 수산대학, 해양대학의 위상은? 해양관련 산업의 성장도는? 해안지역의 발전도는? 해양오염의 심각성은? 어부와 선원의 삶은?

이 글은 남해안시대의 도래를 국가균형발전과 동아시아 해양공동체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남해안시대의 역사적 의의

21세기 초, 2005년 오늘에 있어 남해안시대가 갖는 역사적 함의는 무엇일까?

주지하듯,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대영제국의 쇠퇴와 함께 문명의 중심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이동하였으며, 1980년대부터 떠오르기 시작한 일본의 강성과 함께 태평양시대가 개막되었다. 특히, 21세기와 더불어 급부상하는 중국의 영향으로 역사의 지정학적 중심축은 동북아시아 혹은 동아시아 쪽으로 확연하게 이전하고 있다. 만약 10년 뒤, 인도가 마침내 거대한 혼란과 신비를 헤치고 새로운 강국으로 등장한다면 세계역사는 분명히 동아시아의 연안국가들(예컨대,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폴, 대만, 인도,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짜여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의 추세를 감지하여, 2001년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청색혁명을 통한 해양부국의 실현”이라는 비전을 추구하면서 “Ocean Korea 21(21세기 해양한국)”을 위한 해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해양산업의 국내비중을 2000년도 GDP의 7.0%에서 2030년에는 11.3%로 제고시키며, 연안거

2) Rediker(1987/1991; 271)의 결어처럼, “바다는 민주주의의 유모가 아니다. 권위와 특권은 바다의 쌍둥이 양자들이다. 선장의 말에 즉각적으로 군말없이 복종하는 것이 해상의 규율이다.....그러나 동시에 바다는 민주주의의 유모이기도 했다. 해상무역은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했고 이들로 하여금 권위와 특권에 대해서 투쟁하면서 삶을 보내게 했기 때문이다.”

주 인구비율은 33.5%에서 40.6%로, 해양관광인구는 844만명에서 2천525만명으로 증가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해양입국론은 당시의 대북 햇볕정책에 밀려 불운하게도 제대로 빛을 보지도, 받지도 못한 채 퇴색해 버리고 말았다.

천우신조라 할까, 이제 다시 우리의 바다, 남해를 향해 그리고 남해를 통해 국가발전의 에너지를 결집하고, 사회통합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일련의 시도(유우익, 2004, 2005; 최상철, 2004)가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다. 남해안시대의 선언은 시간적으로 서해안시대 혹은 황해시대에 비하여 뒤늦었다. 중국효과를 신속하고도 민첩하게 고려한 "동북아시대"와 맞물려 서해안/황해시대는 이미 출발하였고, 특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란과 함께 그 추진력을 더욱 강하게 얻고 있다.

최근 한국의 대표적 건축가이자 도시설계가의 한 사람인 김석철(2005)은 [희망의 한반도 프로젝트]라는 구상을 통하여, 황해연합 혹은 황해공동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동북아시아는 EU와 같은 국가연합이 아니라 황해를 중심으로 중국의 선양, 베이징, 칭따오, 상하이, 동북3성, 한반도, 일본 서남해안 도시 군을 아우르는 도시 간 연합을 통한 경제공동체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을 4개 권역(서해는 서울 메갈로폴리스, 금강－새만금(공주, 연기, 군산, 부여, 공주, 대전 등 포함) 어번클러스트(urban cluster), 남해는 부산－광양 어번클러스터, 동해는 영남(대구, 구미, 포항, 울산을 포함) 어번클러스트로 나누어 권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일찍이 2001년에 인천 및 수도권의 학자들이 주축을 이루어 2001 인천선언(Incheon Declaration 2001)을 외치면서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Northeast Asia Intellectuals' Solidarity Korea: NAIS Korea)를 설립하여 동북아공동체(Northeast Asian Community)의 형성을 추구해 오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3)]

그렇다면, 우리의 남해안시대는 만시지탄의 뒷북치기인가? 아니다. 후발주자의 특권이자 과제인 청출어람의 묘를 살리는 상생적 경쟁의 길이 있다. 해신 장보고

3) 독도문제의 여파로 동해시대도 머지않아 주창될 것으로 전망한다. 바다의 가치를 논함에 있어서 남해, 황해, 동해는 모두가 우리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다. 따라서 각 바다마다 남해안시대, 황해시대, 동해시대가 선포되어 상호 유기적인 협조와 연대 속에서 공통으로 해양개발과 해양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다만, 한반도는 북쪽이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남해는 황해와 동해를 연결시키는 교량의 역할을 하며, 부산과 광양이라는 한국 최대의 무역항이 위치한다는 점에서 입지적으로 더욱 중추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거론 중인 한국과 일본 간의 해저터널 건설과 유라시아대륙철도 계획을 감안하면 그 상대적 중요성이 부각된다.

해상왕의 진취적 기상과 해성 이순신 장군의 충무정신이 서려 있는 남해 바다를 우리의 일터와 삶터 그리고 영혼의 안식처로 삼을 우리들 남해안시대의 개척자들은 더욱 심원하고, 더욱 실질적이며, 더욱 진솔한 꿈과 전략을 찾고자 한다.

첫째, 남해안시대는 동북아시아라는 정치군사적 혹은 경제적 규정성이 강한 공간개념 대신에 동아시아라는 문명사적으로 서유럽에 대비되는 문화적－의사소통적－협력적 공간을 추구한다. 즉, 남해안시대는 기존 역사발전을 주도해 왔던 서구적 세계관(예컨대, 제국주의와 같은 패권주의나 자연파괴와 같은 경제성장중심주의 등)을 극복하여 새로운 대안적 사회발전을 모색하려는 시대정신의 발로이다. 국가중심의 편향된 가치체계와 인식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 세계를 향해 나아가면서 다양한 차이와 이질적 갈등을 포용하고 관용할 수 있는 사해동포주의(cosmopolitanism), 즉, 새로운 세계화를 지향할 것이다. 수많은 하천과 강들이 모여들어 하나가 되는 바다, 그 바다를 삶의 중심에 두는 남해안시대는 지역개발전략이기에 앞서 새로운 지역개발 목표와 전략을 요구하는 대안적 발전가치를 의미한다. 그래서 남해안시대는 더욱 심원할 수 있다.

둘째, 영호남지역 간의 정치적 갈등을 두고 망국지병이라고 우려하던 때가 엊그제 같다. 물론, 정치인들에 의한 지역적 분할/대립(Divide and Conquer)전략은 아직도 포기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경상남도, 광주, 부산의 단체장들이 남해안 공동개발을 위한 협의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현상은 고무적이다.[4] 영남과 호남 간에 여전히 정치적 지향성이 상이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일종의 미묘한 정경분리형 지역개발전략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다. 앞으로 구체적인 개발방안이 거론되면 이해관계가 첨예해져서 크고 작은 갈등이 분출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남해안시대는 어쩌면 전남/광주와 경남/부산에게는 “공생 아니면 공멸”이라는 절박한 정치경제적 상황을 예견한 시대적 각성의 산물일지 모른다. 속단이 될지는 몰라도, 행정수도 이전의 성사여부에 관계없이 대전 이북의 지역은 현재 이미 급속하게 수도권화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이남의 인근지역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면서 더욱 확실하게 수도권화 될 것이다. 어쩌면 대구조차 수도권화 될 지도 모른다. 주지하듯,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수도권의 흡입 및 확산능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비수도권지역으로서 전남/광주, 경남/부산은 일종의 지역적 마지노선이 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갖지 않을까?

---

4) 울산은 동남해안에 위치하는 만큼 반드시 남해안시대의 주요 구성원으로 참가해야 한다.

전국토의 수도권화라는 국토구조의 획일화-균질화는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어쩌면 그것은 끔찍한 혹은 지겨운 악몽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남해안시대는 한편으로는 수도권화라는 내적 식민주의(internal colonialism)를 제어하는 가장 유효하고도 실질적인 공세전략이 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해를 공유하는 영호남간의 오랜 오해와 반목을 해소할 수 있는 상생적 협동전략이 된다.[5)]

셋째, 남해안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다. 산과 섬, 바다와 강, 어촌과 농촌, 도시와 시골이 조화롭게 어울려 져서 우리들의 일상적 피로와 권태를 씻어주는 휴식처 혹은 청량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남해안이 차세대 관광지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낙후지역의 대명사로 간주되는 남해의 수많은 섬들이 머지않아, 관광/휴양/건강식 어촌으로 탈바꿈하여 도시민들이 지닌 해양전원의 꿈을 충족시켜 줄 것이다. 특히, 바다 밑은 더욱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야말로 자원의 보고이다. 어패류 및 해초류는 물론이고 각종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니, 바다는 우리들 인류에게 남겨진 마지막－참으로 아껴써야 할－선물이다. 남해안시대의 개막은 바다의 위대함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을 촉구하고, 바다의 풍요함에 대한 우리의 진솔한 고마움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우리들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소박하게 살아가는 지혜, 다시 말해, 생태주의 가치관을 터득해 갈 수 있다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다.

필자는 다소 “거창하게” 남해안시대의 역사적 의의를 검토해 보았다. 그 이유는 인간역사에서 해양문명과 해양문화가 차지했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삼면이 바다인 한국의 역사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바다를 아끼고, 활용했던지 심각하게 반성해 보고 싶어서이다. “신에게는 아직 열두척의 배가 있나이다”던 비장하나 결연한 구국의 의지를 되살려서 오늘 2005년 이 시점의 불안하게 요동치는 조국에 대하여 “우리에게는 아직도 미개발된 무한 잠재력의 남해안이 있다”고 알려야 한다.

---

5) 황해시대는 그 역사적 명분과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수도권의 막강한 구심점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Ⅲ. 국가균형발전과 남해안개발

1. 균형발전의 재인식

균형발전은 한국 내 모든 지역의 소득수준, 경제력, 문화시설 등을 동등하게 혹은 평등하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 내부에서 혁신적 힘을 결집하여, 중앙정부의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자립을 성취하려는 것이 균형발전의 목표이다. 이는 그간 심화된 지역 간 격차, 특히 수도권－비수도권, 도시－농어촌의 발전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나 균형발전은 수도권의 희생 하에 비수도권을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된 국가재정으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상생발전이라는 바람직한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경우 기존의 격차가 제대로 해소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총 인구의 절반가량(47.6%)이 수도권(국토면적의 11.8%)에 몰려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예산배분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정권이 어떤 지역개발정책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지역간 격차를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불평등 혹은 격차의 고착화(crystallization)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 과정과 상응하여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면, 그 격차가 일시적으로 다소 완화될 수는 있지만, 비판/저항세력의 견제와 역습, 지속적인 투자재원의 확보문제, 투자의 비효율성, 정치적 기반의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격차해소가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다시 증가할 수도 있다.

요컨대, 균형발전은 매우 어려운 국가과제로서 단기간에, 특히 정략적 의도 하에 추진될 경우에는 결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소위,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의 폐해가 특히 심하다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정치문화에서는 선거용 선심정책으로 수많은 지역개발 방안이 제시되어 왔다. 따라서 균형발전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가들의 오랜 토론과 다양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뒤에 정파를 초월한 여야협조의 구도 하에서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 지금까지의 모든 정권들이 내놓은 균형발전정책들이 실패한 기본적인 이유가 화려한 미사여구와 정교한 추진전략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나 정치적 협력을 도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균형발전의 효과 혹은 의미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격차는 모두 소득격차, 경제력의 차이, 시설물/활동인구 수의 차이와 같은 양적 지표에 의하여 측정되었다. 그러나 삶의 질, 주관적 만족도 혹은 웰빙이 가장 중요한 발전가치로 인식되는 최근의 전향적 추세를 감안할 때, 지나치게 경제성장의 측면에서만 균형발전의 의미를 한정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소득수준이 비록 낮더라도 농부나 어부가 자연 속에서 자유로이 그리고 여유롭게 일을 한다면, 대도시의 정신없는 샐러리맨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웃 간의 근린공동체가 형성된 평화로운 시골마을이 범죄가 빈번하고 상호무관심으로 살벌한 도시 거주지역보다도 더 나을 수도 있다. 균형발전의 척도에 탈물질주의적 가치, 예컨대, 문화적, 심미적, 생태적 관점을 더욱 비중있게 포함해야 한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이 지역주도의 혁신전략과 지역특성화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권력의 분권과 기능의 분산을 통하여 비수도권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원칙은 타당하고도 적실하다. 다만, 권력과 기능의 지역적 분산을 지방자치의 내실화 및 공고화라는 관점에서 철저하고도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광범위하면서도 초당파적인 사회적 토론/검정과정”을 무시하거나 생략하였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상당한 반발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2. 남해안개발의 균형발전적 차원

남해안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남해안시대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자원부, 2005)의 목표나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관성을 갖는다.

1) 낙후지역 자립기반조성

- 낙후지역개발
- 농산어촌 RIS 구축
- 지역경제 활성화

2)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 지역인프라 확충: 동서남해 3개 연안축과 북부축을 연계한 ㅁ자형 국토순환망 건설

- 대외개방 거점 확충: 경제자유구역을 개방거점화, 부산신항 및 광양항을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육성

3) 지역 문화관광 육성

- 6대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남해안 관광벨트,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벨트, 강원・산악・환동해권 관광벨트,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평화관광벨트, 서해안 관광벨트, 지리산 관광벨트

한국사회에서 대체로 어촌과 섬은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간주된다. 남해를 중심으로 산재한 수많은 어촌과 섬을 고려할 때, 남해안의 상당 지역들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대상인 낙후지역에 포함된다. 그리고 남해에 위치하는 부산과 광양은 한국 최대의 항구로서 국제교역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남해안지역의 경제적 중추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은 오래 전부터 거론된 영호남공동발전전략으로서 동서화합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이상의 정책적 차원과 더불어, 남해안시대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아래의 두 가지 발전이념적 차원을 추가적으로 내포한다.

첫째, 남해안시대는 해양중심형 발전주의를 추구한다. 해양시대론 혹은 해양입국론의 관점에서 볼 때, 남해안시대는 국토개발전략에 있어서, 유우익(2005)의 적절한 지적처럼, 기존의 내륙지향형 개발을 보완, 수정, 극복하는 해양지향형 개발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토개발의 축을 내륙에서 해양으로 이동시켜 전체적으로 국토개발의 균형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내륙 중심적이고 중앙 집중적인 국토구조를 짜서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유지시켰다. 수도 서울과 하천 중상류의 분지를 점한 몇몇 내륙 도시들이 공간구조의 상위계층을 지배하여 왔다. 이런 구도 하에서 바다는 장애에 불과했고 섬과 바닷가는 유배지로나 기억될 만큼 버려진 땅이었다. 문화교류는 지체되었고 근대화에 뒤진 채 남들에 의해 이루어진 개항은 식민지지배로 이어졌다. 해방 후에도 국토의 분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화・왜곡시켰다. 남한은 대륙으로의 접근성을 차단당해 섬과 다를 바 없이 되었고, 북한은 대양으로 나아가지 못해 내륙과 같은 신세가 되었다. 절반 이상의 배후지를 잃은 서울로의 집중에 의한 수도권의 과대 과밀은 국토의 불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였다.....반도국가로서 해양 지향적 개방성을 살리는 것은

> 항해와 교역의 시대 이전부터 이미 그러했지만, 현대와 미래에 있어 세계화의 흐름에 부응하고 국가발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긴요한 방안이다. 공간적으로 그 요체는 지금까지의 내륙 중심적인 폐쇄적 구조를 해양 지향적 구조로 개혁하는데 있다. 특히 한반도가 지구 차원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문명중심의 이동과 때를 같이 하여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통해 주변부성이 극복되고 있으므로, 지금이 그렇게 할 적기이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둘째, 남해안시대는 세계지향형 발전주의이다. 남해안벨트는 남해안시대를 조직하는 핵심적인 실천개념의 하나이다. 그러나 남해안 벨트가 남해안 지역들 간의 관광, 산업, 문화교류의 벨트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여전히 내륙 지향적 타성을 보여 줄 뿐이다. 해양은 원천적으로 국제적, 초국가적 혹은 세계적이다. 남해안시대는 탈 국가주의 및 전지구주의(globalism)의 물결과 함께 대두하는 지역(연합)주의를 표상하고, 대변하며, 실천해야 한다. 명실상부한 해양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한다. 예컨대, 기존의 부산－후쿠오카－상해를 확장하여 상하이－칭다오－광주/목포－오사카－고베－쿄토-광양/순천/여수/사천/충무－나가사키－후쿠오카－시모노세키－/마산/창원/진해/부산/울산을 묶는 해양도시 연합 혹은 동아시아 해양공동체를 구상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남해안시대는 "한반도의 세계화 전선"(유우익, 2005)이자, "새로운 지역주의"(최상철, 2004)의 실험이 될 것이므로 국가균형발전의 대외적 확장 혹은 세계적 차원의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

셋째, 남해안시대는 문화중심형 발전주의이다. 남해안시대의 가장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성과는 기존 영호남 갈등의 상생적－창조적 해소이다. 특히, 남해안시대는 이념적으로 기존의 경제지상주의나 물량적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고, 삶의 질 혹은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따라서 영남문화와 호남문화가 어우러지는 과정에서 독특한 남도문화 혹은 고유한 남부풍류가 형성될 수 있다. 전라도 판소리의 해학적 저항성과 (경북지방의 고급 양반문화에 대비되어 불리던) 부산/경남의 하도문화 혹은 뱃놈들의 거칠고 억센 저항적 민중문화는 두 지역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지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운명적으로 점지하는 것이었다. 두 지역의 문화는 남해안시대와 함께 더욱 활발하게 교류－수용－변용하면서 발전하여 한국사회의 문화적 성숙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처럼 남해안시대는 새로운 해양성문화를 꽃피움으로써 한국을 문화국가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Ⅳ. 동아시아 해양문화공동체 형성

남해안시대의 기획은 문명사적으로는 내륙문명에 대비되는 해양문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남해안시대의 개막은 국내적으로는 그간 내륙 중심형 혹은 수도권 중심형 지역개발의 편향성을 벗어나 해양지향의 개발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국토의 균형개발을 추구한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지만 남해안시대의 역사적 과제는 단순히 남해안개발이라는 국내적－산업적 지역개발의 논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낙후된 해안지역의 어촌 및 도서지방의 경제적 자립내지 활성화를 진흥시킨다는 목적은 백번 강조해도 타당하지만, 이와 같은 직접적인 당면과제가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21세기에 걸맞은 어떤 역사적－시대적 비전을 전제하면서 구상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바다에는 현안이 되어있는 독도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의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바다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끼리 해상교통과 해양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호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과 남한도 최근까지 서해에서 끊임없이 충돌하지 않았던가. 이처럼 바다를 경제적 이해관계나 정치-군사적 권력관계에 의한 투쟁의 장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바다의 보다 원대한 미래가 없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관용하는 바다의 위대한 침묵이 우리 인간들에게 제시하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 남해안시대의 선언이 명실상부한 해양시대의 도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해양에 대한 철저한 역사적 인식과 철학적 성찰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 동아시아에 바람직한 공동권을 설정하는 틀로서 “동아지중해 모델(東亞地中海 模型, East Asian Mediterranean Model)”에 의거하여 동아시아의 연대협력체 구성과 해양네트워크의 구축을 제안하는 윤명철(2000: 17-25)에 주목해 보자. 그에 의하면, 한국, 일본, 중국과 대만, 러시아가 포함되는 동아지중해는 비록 역사적으로는 적지 않은 갈등과 정복의 쓰라린 과거를 지니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은 협력과 공존의 시대를 유지한 지정학적으로 운명공동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지리문화적으로는 놀랍게도 문화의 공유 범위가 상당히 넓었다. 유교, 불교 등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제도, 경제양식, 한자, 생활습관 등 유사한 부분이 많았다. 사실은 종족과 언어의 유사성도 적지 않았다. 비농경 문화권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의외로 중국도 유목문화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러한 문화의 유사성 때문에 외부세계에서는 이 지역을 하나의 문화공동체로 보기

도 하였다. 이와 같은 역사적 인식을 토대로 동아시아가 하나로 뭉쳐야 할 시기가 절박하게 도래하였음을 주장한다.

> "사실 역사적 필요성으로 보아 이미 19세기 말에 협력체를 추진했어야 했는데 때를 놓친 것이다. 그 결과로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모두가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 가해 당사자인 일본 또한 비극을 겪게 된 것이다. 그러나 블록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그 외에도 국지경제권의 난립과 중복, 비효율성 등 문제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그 결속의 공통분모로서 해양을 매개로 한 동아지중해적 형태가 가장 유효하다. 이 질서 속에서 통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잘 조정된 협력체 내지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세계사 속에서 동아시아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윤명철, 2000: 23).[6]

나아가, 미래의 통일 한국은 이 새롭게 펼쳐질 동아지중해 질서 속에서 그야말로 참된 동아시아발전의 균형자(均衡者, mediator? balancer?)의[7] 역할의 할 수 있다(윤명철, 2000: 24):

>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동해, 남해, 황해, 동중국해로 이어지는 동아지중해의 중핵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분단시대, 냉전시대에는 적대적인 양대 힘이 격돌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 요인으로 운명적인 굴레를 씌웠다.....그러나 남북이 긍정적으로 통일될 경우,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공히 활용하며, 남해, 동해, 황해, 동중국해 전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특히 모든 지역과 국가를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해양 네트워크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다. 우리 바다를 통해서만이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 중요한 해로를 장악하고 해양조정력을 가질 경우, 각국 간의 해양충돌 및 정치 갈등도 해결할

---

6) 동아시아/동북아공동체의 필요성 및 내용에 관해서는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2004)를 참고할 것.

7) 현재 한국에서는 "동북아 균형자"의 개념을 둘러 싼 논쟁이 치열하다. 현실성이 없는 미사여구로서 냉전적 발상의 연속이며 기존의 한미일 동맹관계를 파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강소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위상과 역할에 적절한 자주적 외교노선으로서 평가하기도 한다. 한국의 정치적-경제적 균형자 역할에는 이견이 많겠지만, 문화적 차원에서의 역할은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시장, 일본의 기술, 그리고 한국의 문화와 철학이 화합한다면, 동아시아는 그야말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한계를 초월하여 사해동포주의라는 세계형성의 새로운 가치를 생성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수 있다. 또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건설하고 활용하는 일만 뒷받침된다면 동아시아에서 하나뿐인 물류체계의 핵심 로터리로서 교통정리가 가능하다.....이처럼 해양의 비중을 높이고 중핵 연결지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경우, 동아시아에서 정치－군사적인 비중이 커짐은 물론 경제적인 면이나 교역 면에서도 이익은 커진다. 즉 군사적－경제적인 열세를 극복하면서 최소한 중핵조정 역할은 가능해 진다.....그래서 동아지중해라는 모델 속에서 우리 역사를 다시 해석하는 작업은 더욱 중요하다."

이상에서 간략히 소개된 동아지중해 모델은 21세기 한국의 가장 적실하고도 유일한 발전방향으로서 해양입국론을 역사적 관점에서 제기한다. 이를 기반으로, 필자는 이 글을 통하여 남해안시대의 선언은 그 최고의 가치지향점으로서 동아시아 해양문화공동체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현대사회의 복합적 중첩성 및 기능적 연계로 인하여 오늘날에는 정치, 경제, 문화를 상호 분리하여 이해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성장 내지 경제개발의 도그마에 현혹된 사람들이 적지 않으므로 문화중심주의 내지 문화적 시각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에서 한류(韓流)의 열풍이 휘몰아쳤던 사실을 기억한다면, 문화를 통한 갈등의 해소나 조정, 나아가 친선과 협력의 강화가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욘사마 팬들은 적어도 독도문제에 대하여 즉각 군국주의자의 편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최소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자 할 것이다. 오랜 기간 한국에 대하여 우호적 관계를 맺어 온 대마도 주민들이 한국 측의 "대마도의 날" 선언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입장으로 돌변하지 않은 것도 문화교류의 힘 때문이 아닐까?

동아시아 해양문화공동체는 해양도시 혹은 해양지역들 간의 활발한 문화교류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그 첫 과제를 시작할 수 있다.[8]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국가 간 문화갈등(예컨대, 역사논쟁 등)의 폭과 깊이도 증대하고 있지만, 문화갈등은 정치－경제적 갈등과는 달리 원활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하여 보다 원만한 상호이해나 인정의 단계에 도달하기가 상대적으로 덜 어렵다. 남해안개발만 하더라도 상호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해 질 수 있는 거점개발 대신에 호혜적인 남해안(역사/관광/문화)벨트 개념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은가?

---

8)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 및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로서 김성국(2001, 2005)을 참고할 것.

물론 남해안시대는 구태의연한 패권지향형－분열형 지역주의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21세기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상생형－개방형 지역주의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 편협한 향토주의나 지연주의를 거부하는 "비판적 지역주의(critical regionalism, 최원식, 2005: 7)"와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가는 사해동포주의(cosmopolitanism)를 동시에 추구할 것이다.

해양시대의 전주곡으로서 남해안시대는 국내적 균형발전의 차원에서는 남해안 개발을 의미하고, 세계적 균형발전의 차원에서는 동아시아 해양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추구한다. 특히, 남해안시대는 해양주의와 문화주의에 입각하여 해양문화의 중흥에 노력함으로써 그 문명사적 의의를 더욱 빛 낼 수 있을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시작하여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로 그 첫 결실을 맺어 보자.

참 고 문 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산업자원부 (2005), [2005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안)].

김석철 (2005), [희망의 한반도 프로젝트], 창비.

김선표 · 홍성걸 · 김민종 (2003),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 논리 보강 방안에 관한 소고," [한국도서연구] 15: 47-64.

김성국 (2005), "한일 문화교류와 동아시아 네트워크 구축," 한일공동포럼 3차년도 연구(출판 중).

김성국 (2001), "21세기 해양도시 네트워크 구축방안," [21세기 동아세아 해양문명-21세기 동아세아 해양 · 생활 · 문화 · 경제 네트워크 형성의 전망과 과제], 국제학술심포지엄(해양문화재단,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중국 상해사회과학원, 일본 장래세대총합연구소 주최, 10월 19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발표논문집. pp.71-82.

유우익 (2005), "남해안벨트, 한반도의 세계화 전선," 남해안관광벨트개발 세미나(한나라당 지역화합 · 발전 특별위원회 주최, 2월 26일 통영 마리나 리조트) 발표논문.

윤명철 (2000), [바닷길은 문화의 고속도로였다 - 동아지중해와 한민족 해양활동사], 사계절.

전태갑 (2001),"일본의 도서개발 실태," [한국도서연구] 11: 167-180.

최상철 (2004), "남해안시대의 도래와 새로운 지역주의의 창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국제관광개발세미나(한나라당 지역화합특별위원회 주최) 발표논문.

최원식 (2005), "비판적 지역주의로서 인천학," [인천학의 원근법],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편) (2004),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동아일보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부산발전연구원 · 한국해양대학교(2001), [해양수도(Ocean Capital) 21 계획수립연구].

Rediker, Marcus (1987/2001), [Between the Devil and the Deep Blue Sea], Cambridge University Press(박연 옮김, 악마와 검푸른 바다사이에서, 까치, 2001).

<Abstract>

The Age of Southern Coast and Balanced Development of Korea

Seung-Kuk Kim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mutually reinforcing relationships between th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age of Southern Coast and balanced development of Korea. First, the era of Southern Coast seeks to realize a cultural-communicative-cooperative development instead of the existing economic-competitive development. Second, it tries to achieve a reciprocal development between Young-nam and Ho-nam, overcoming the conflicts and oppositions among them. Third, a sea-centered and ecological logic of regional development rather than the hitherto inland-centered anti-natural developmentalism. The regional development of Southern Coast should be guided to accomplish the ultimate purpose of the balanced development on global level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n East Asian community for marine cultures.

Keywords: the age of Southern Coast, balanced development of Korea, the construction of on East Asian community for marine cultures.